

김정일 정권 향방에 따른 중국의 선택

전 병 곤

국제관계연구실 연구위원

북한정권 창건일을 기념하는 9·9절 행사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불참함에 따라 그의 건강이상설이 확산되고 있다. 제한된 정보로 김정일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당뇨와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에 시달려온 김정일의 건강악화는 북한체제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권력이 김정일 개인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북한은 권력의 합법적 교체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국가라는 점, 김정일의 후계자가 지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땅한 후계자도 없다는 점에서, 김정일의 유고는 북한 내부의 권력 갈등과 주민의 동요, 경제난의 심화와 대량난민 발생과 같은 급변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물론 당장 이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김정일의 건강 악화를 계기로 북한의 급변사태에 관한 국내외의 논의는 다양하게 확대될 것이다. 북한의 혼란과 급변사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통일의 위기이자 기회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질서와 균형에도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오랜 우방으로서 북한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의 북한문제 인식과 전략적 선택은 주목된다.

우선 중국은 근기 내 북한 체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그 이유는 김정일 중심의 당·군 통치 조직이 견재하고, 사상·이념무장이 견고하며, 외부세계와 상대적으로 고립된 주민들의 생활이 그럭저럭 유지·개선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중국은 북한이 현재의 폐쇄된 상황과 핵무장을 통한 국제사회와의 갈등을 이용한 생존방식을 고수할 경우, 특히 김정일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 (준)유고 상황으로 전개될 경우 등과 같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우려는 북한이 잠재적 경쟁국인 미국, 일본 등 해양세력의 압력을 막아 주는 완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지정학적, 전략적 안보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다음의 상황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즉, ①김정일의 유고가 북한의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해 대규모 난민이 중국으로 유입될 경우, ②북한 붕괴 직전·후 상황에 따라 내전, 우발적·국지적 대남 무력도발, 국제개입에 의한 무력충돌 등이 발생해 중국 주변지역의 평화가 깨질 경우, ③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가 중국 내 분리주의자와 연계된 세력에 넘어갈 경우, ④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를 구실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본격적 개입이 발생해 중국의 영향력이 상실될 경우 등이다.

이의 방지를 위해 중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평화와 안정,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공식목표로, 북한 체제(김정일 정권)의 유지·지원, 대북 영향력 강화를 비공식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중국은 작금의 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세습군주’인 김정일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향후 뚜렷한 대안이 없는 한 북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김정일 정권을 도울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김정일 유고 시에도 북한의 지도부가 북한 군 및 주민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중국은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북한체제의 회복을 통해 북한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 유지·확대를 위한 친중 성향의 지도부 형성에 정치외교·경제적 수단을 동

원해 관여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완전한 통제력 상실로 중국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회복, 안정유지를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할 시에는 중국의 정책적 선택이 달라질 것이다. 즉, 북한체제의 붕괴는 북한 문제가 북·중 양자관계 속에서 해결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바, 중국은 이해당사국 또는 국제기구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희망할 것이다. 그동안 중국은 경제적 부상과 올림픽의 개최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왔고, 향후에도 국제사회의 규범 형성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임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붕괴 시에도, 국가목표인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자 할 것이며,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우선 북한 붕괴 징후가 발견되면, 북·중 접경지역에 군대를 동원해 북한 난민의 대량 유입을 적극 차단하고 국경지역의 안정을 도모할 것이다. 동시에 북한 사회의 안정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하는 한편, 단독 부담을 피하기 위해 관련 당사국들과 인도주의 원칙과 국제법에 따라 난민과 북한지역 안정화 대책을 논의할 것이다.

이해당사자인 한국, 특히 미국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만일 미국이 중국을 이해상관자(stakeholder)로 인정한다면, 중국은 미국에 적극 협조하면서 자국의 목표인 한반도의 안정과 일정 수준의 영향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는 미·중관계의 특성상, 중국은 6자회담이나 UN 등을 통한 다자적 접근으로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논의 및 평화유지군에도 참여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선별적이다. 그러나 ①급변사태 직후 통제할 수 없는 군사적 충돌 상황에서 한미 연합군이 중국의 동의 없이 군사작전을 감행할 경우, ②북한 급변사태 해결 이후 중국의 사활적 이익을 보호할 수 없는 방향으로 북한의 상황전개가 예상될 경우, ③이로 인해 중국에 심각한 안보위협이나 영향력 상실을 초래할 경우, ④이에 대한 시정이 정치외교 및 경제적 개입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중국은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최후의 옵션으로 남겨둘 것이다.

